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4. 1. 16.**(화) 16시~1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 김성주 / 박주민 / 윤영덕 / 김홍걸 / 윤미향

강준현 / 최혜영 / 양정숙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회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관계사학회

후원 | (사)전태일과친구들, 대구환경운동연합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안)

1. 목적

- 조세이(長生)탄광 강제동원 수몰 피해자 유해의 한·일 공동 발굴 및 봉환

2. 일시/장소

- 1. 16(화) 16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공동주최: 국회의원 우원식/김성주/박주민/윤영덕/김홍걸/윤미향/강준현/최혜영/양정숙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회,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관계사학회

4. 후원: (사)전태일과친구들, 대구환경운동연합

5. 식순

시간	내용	비고
16:00 ~ 16:10 (10분)	1) 개회사 (나행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2) 인사말 (참석 국회의원 및 내·외빈)	사회: 장경호 (강원대)
16:10 ~ 17:10 (60분)	1) 발제(15분) ① 남상구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2) 패널토론(각 10분) ① 김인수 대구교대 교수 ②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③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연구위원 ④ 김동명 국민대 교수 3) 질의 응답(5분)	좌장: 나행주 (건국대)



C O N T E N T S

개회사

나행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4

인사말

이노우에 요코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 공동대표 6

우원식 국회의원 8

김성주 국회의원 10

박주민 국회의원 12

강준현 국회의원 14

김홍걸 국회의원 16

양정숙 국회의원 18

윤미향 국회의원 20

윤영덕 국회의원 22

최혜영 국회의원 24

발제

남상구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실장 27

토론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41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45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51

김동명 국민대 교수 57

개 회 사



나 행 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나행주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다행다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일관계사학회는 학회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2~3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학술행사를 하였고, 그 인연이 작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의원실을 비롯한 의원실(우원식/김성주/박주민/김홍걸/윤미향/강준현/최혜영 의원) 및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조세이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일본) 등과 함께 일본 야마구치현 소재 조세이(長生)탄광에 수몰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조속한 유해봉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위 ‘유골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무거운,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의 학술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사지불망은 후사지사야(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인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세이(長生)탄광의 수몰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우리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이탄광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실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 일환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리가 바로 오늘의 학술 토론회입니다. 이를 위해 다망하신 중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의 남상구 박사님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을 주제로 귀중한 발제를 준비해 주셨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경미 연구위원님,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위원님, 그리고 국민대학교 김동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조세이탄광 피해자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반드시 이루고 또한 한일 간의 아픈 과거사를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 유골봉환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봉태 변호사님, 포스터 제작에 힘써주신 이재갑 작가님, 장소 마련과 자료집 제작 등 모든 면에서 수고해 주신 운영덕 의원실의 허남진 선임비서관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한 세기 가깝게 막힌 조세이탄광의 입구가 활짝 열리고 바다의 제왕인 용신의 가호로 깊은 바닷속 갯도에서 막장에 이르기까지 ‘유골봉환’이라는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길 염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2024. 1.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나 행 주

인사말



이노우에 요코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 공동대표

먼저 이 토론회 제목이 “장생탄광 한일공동 유골발굴 및 봉환”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36명의 조선반도출신 희생자와 47명의 일본인 희생자도 포함 되어있어서 저희 “새기 는회”는 “한일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유골발굴을” 이라고 오랜 세월동안 호소하고 왔습 니다. 그 공동 인식을 토대로 한일시민의 연대의 힘이 결집을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기는데”는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그 힘으로 일본정부를 움직이게 하 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은 사고 당시 암흑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쓰면서 갯구를 향해 필사적 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무념의 사망자들을 위해서 적어도 “갯구를 열어드린다”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책임일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도의적 책임이기도 합 니다.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갯구를 연다”라는 목표로 정부교섭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만일 그 갯구를 일본정부가 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기는데”는 시민의 힘을 모아 열게 할 각오입니다.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장생탄광 유골발굴을 한일시민·한일정부의 공 동사업으로 완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입니까! 한일 우호의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생탄광 희생자분들입니다.

“한국유족회”의 오랜 세월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한일정부를 움직이게 합 시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
공동대표 이노우에 요코

はじめに、この討論会のタイトルが「長生炭鉱 韓日共同遺骨発掘及び奉還」となっていることに、大きな喜びと期待を感じています。136名の朝鮮半島出身犠牲者と47名の日本人犠牲者も含まれており、私たち「刻む会」は、「韓日政府の共同事業で遺骨発掘を」と長年訴えてきました。その共通の認識のもとに韓日市民の連帯の力が結集しはじめた歴史的な今日という日を迎えました。

「刻む会」は、市民の力でできることをやり遂げ、その力で日本政府を動かそうと頑張っています。犠牲者の皆様は事故発生時に真っ暗な中を冷たい海水を浴びながら坑口を目指して必死に走ってきました。その無念の死者の皆様にせめて「坑口を開けてさしあげる」ことは、日本政府の責務であり、今を生きる私たちの道義的責任でもあります。

今年が正念場です。「坑口を開ける」ことを目標に、政府交渉をさらに強化します。万が一その扉が開かなくても、「刻む会」は市民の力を結集してやりきる覚悟です。

「強制連行・強制労働」の象徴的な存在の長生炭鉱の遺骨発掘を、韓日市民・韓日政府の共同の事業として成し遂げることは、どれほど明るい未来がきずけるでしょうか！ 韓日の友好の橋をかけるのは、長生炭鉱の犠牲者たちです。

「韓国遺族会」の長年の願いを叶えるため、共に連帯し韓日政府を動かしましょう。最後に、この討論会を企画し成功に向けて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挨拶とします。

2024年 1月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共同代表 井上 洋子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81주기를 맞이해 한·일 공동유해발굴과 송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는 1942년 2월 3일, 우베시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조세이(長生)탄광 갱도에서 낙반사고가 발생해 바닷물이 침수되어 183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희생된 참사입니다. 이 중 조선인 노동자는 무려 136명에 이릅니다.

수몰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왔거나 일제수탈에 의한 생활고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 온 노동자였습니다. 희생된 노동자 한분 한분이 일제 침략전쟁 수탈 역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81년이 지난 현재도 수몰 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노동자 유해 봉환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해 3월 일제 강제동원(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해결책으로 일본전범기업의 참여 없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마련해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존심은 물론 국민 자존심마저 짓

밝은 처사이자 조세이탄광 수몰희생자 문제 해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흥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독립영웅의 역사를 조명하고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정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유해발굴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저도 희생된 분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국회의원

우 원 식

인사말



김 성 주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수몰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시기입니다.

당시 일제는 국권 강탈에 이어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강제 동원 피해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이 중 20만 명은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조세이 탄광 강제 동원은 일제의 만행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이었던 조세이 탄광에서 136명의 조선인이 수몰되었던 비극적 사건입니다.

생존자들은 탄광 내부는 지나가는 배의 소음까지 들릴 만큼 안전하지 못했고, 일상적인 폭력과 착취에 시달렸다고 증언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8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골 발굴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족들마저도 나이가 들

어 세상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의 역사적 잘못과 강요된 희생의 사슬을 끊어내고 유족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세이 탄광 수몰 피해자 유해 송환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유해 공동 발굴 및 송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님을 비롯해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대구교대 김인수 교수님, 동북아역사재단 이경미 연구위원님,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위원님, 성균관대 오일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깊은谢안을 기대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회,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관계사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겠습니다.

2024. 1.

국회의원

김 성 주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조세이 탄광 유해의 한-일 공동발굴과 봉환을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해주신 한일관계사학회 나행주 회장님, 발제를 준비 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대구교육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동북아역사재단 이경미 박사님,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한혜인 박사님, 국민대학교 김동명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강제징용자 136명이 사망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조선인 강제징용의 비인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고 발생 8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를 수습하거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전후 조선인 유골의 소재를 조사하고 유골 송환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후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후 조선인 유골의 소재를 조사하지 않고 유골 송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사진전이 국민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는 유해 발굴과 송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 송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1.

국회의원

박 주 민

인사말



강준현
국회의원

오늘의 토론회에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오늘 「조세이 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유족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나행주 교수님, 발제에 함께해주신 남상구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42년 2월 3일 일본제국주의 아래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136분이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에서 수몰되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직도 일본 바닷속에 잠겨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8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유골 수습과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유골의

조사와 봉환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조국에서 강제로 끌려가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됐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와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수몰 피해자 유해의 발굴 및 봉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조치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관심과 외면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조세이 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조세이 탄광 사고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제안들이 피해자들의 유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정부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조세이 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국회의원

강 준 현

인사말



김 홍 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홍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이 탄광 한일 공동 유해발굴’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앞장서서 마련하신 더불어 민주당 운영덕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은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빛내주시는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조세이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일본) 등과 관계자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맡아주신 한일관계사학회 나행주 회장님, 귀중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님, 패널토론을 맡아주신 대구교육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동북아역사재단 이경미 연구위원님,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한혜인 연구위원님, 그리고 국민대학교 김동명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조세이 탄광 참사 82년째인 해입니다.

무려 82년 동안 희생자들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의

진상규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덧 한 세기가 지납니다. 이 참혹한 비극에 대한 기억도, 진상을 밝히려는 투지도 점점 얼어질까하는 우려가 큼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 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로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유해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해봉환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세이 탄광 한일 공동 유해발굴 국회 토론회'는 유해봉환을 위해 한국이 펼쳐야 할 외교적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활발한 토론의 장에서 나온 한 마디, 한 구절 모두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유해봉환'이라는 희망에 진일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국회의원

김 홍 결

인사말



양정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덕 의원님의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윤영덕 의원님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속여서 끌고 간 후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산업시설에서 강제노역시켰고, 꽃다운 나이 청년들을 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투입하여 전시(戰時)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한번 없이 현재까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세이(長生)탄광에서도 한국의 준수한 젊은이들을 기만해 모집하고, 채탄량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권을 무시한 채 마치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며 강제노역시켰는데, 1942년 2월 3일 누수(漏水)로 인한 해저 갯도가 무너져 한반도 출신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수몰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세이(長生)탄광에서의 탄광노동자 수몰사고가 일어난 후 82년이 되었지만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유해발굴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세이 탄광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내용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숨겨 오다가 1972년 일본인 교사의 논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뒤 희생자들 위패는 조세이 탄광 근처에 있는 사이코지(西光寺) 사찰에 모셔졌고, 일본인 시민단체에 의해 추도비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해 발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유해 발굴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이모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2006헌마78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국가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사건(2006헌마648)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봉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등을 위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작위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보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외교적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생자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멈추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일 의원연맹을 통해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정지표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정부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 또한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 국회 차원에서 윤영덕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국회의원

양 정 숙

인사말



윤 미 향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강준현, 최혜영 의원님과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관계사학회, 후원해주신 한일역사평화정의행동, (사)전태일과친구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과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함께해주신 나행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님,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님,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님,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님, 김동명 국민대학교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와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942년 2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의 조세이(長生)탄광 해저 갯도가 무너져 채탄하던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수몰됐습니다. 조세이탄광은 거미줄처럼 얽힌 갯도가 육지에서부터 바다 밑으로 10여km까지 뻗어 있었고, 지나가는 어선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갯도가 얇아 붕괴의 위험이 컸음에도 일제는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조선인 노동자에게 채탄을 강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가 발생하자 탄광 측은 희생자들을 구조하기는커녕 갯도로 들어가는 입구

를 틀어막아 버렸고, 일제는 사고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82년이 지난 오늘까지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무엇 하나 온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희생자의 유골은 해저에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은 조세이탄광의 비극을 알리기 위해 ‘장생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를 만들고, 한국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 함께 위령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고,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간토학살 만행에서 사도광산, 조세이탄광,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산적해 있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제라도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세이탄광 조선인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의 경위와 현황을 살펴 조세이탄광 조선인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고 일본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살펴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역사의 비극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 역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1.

국회의원

윤 미 향

인사말



윤영덕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지난 12월,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80년 만에 유골이 고국 땅에 봉환된 고 최병연 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 최병연 님이 끌려간 남태평양 타라와섬에는 조선인 사망자 1,117명 중 돌아오지 못한 유골 1,116구가 남아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 숨진 강제 동원 피해자는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죽어서라도 고국에 돌아온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수몰 사건' 또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슴 아픈 강제징용 피해자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은 한자로는 長生(장생) 탄광이라고도 부릅니다. 1942년 해저 갯도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작업 중인 광부 전원이 수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83명 중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 수가 무려 136명에 달했습니다. 타국으로 끌려가 억울한 노역에 시달리다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 그 유해마저 수습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조세이 탄광에 매몰되어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 유골을 발굴하고자 국회에서 유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마다 희생자를 위한 추도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 봉환에 대한 관심은커녕,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제삼자 배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일 리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사진 전시회 등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 봉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4. 1.

국회의원

윤영덕

인사말



최혜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조세이탄광 한일 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맏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제강점기 국가 정책에 의해 한국인을 해외로 강제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골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00만이 넘는 조선인이 한반도 밖으로 이송되어 노역에 시달렸다는 사실 외에는 그들 중 누가, 어디서 사망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국적과 당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해결에 소극적인 것 모두 양국 정부의 책임 방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남상구 선생님의 발제와 같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치유의 첫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전문가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는 어떤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이를 직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토론회가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과 친구 등을 되찾아 평화 속에 잠들게 하고자 하는 유족 여러분의 염원이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 1.

국회의원

최혜영

발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남상구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 실장)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남상구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 실장)

1. 유골문제란

- 유골 문제는 일제가 국가 정책에 따라 한국인을 군인·군속으로 전쟁터에, 노동자로 탄광 등에 강제로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쟁이 끝나 후 한국인 유골의 행방에 대한 조사와 봉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임.

※ 일본은 2016년 3월 23일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전몰자 유골 수집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2024년까지를 유골 조사와 봉환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함(대상은 일본인으로 한정됨).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책무임을 자각하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발생했던 고통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당한 분들을 상시적으로 찾고, 모셔오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일제 식민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2016.12.19.,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슴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봉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2023.12.4.,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 유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골 실태를 조사하고 봉환함과 더불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원되었고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2.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현황

2-1. 군인·군속

- 해외 전쟁터에서 사망한 조선인 군인·군속은 명부상 21,919명인데 일본 정부가 1945년 8월 이후 한국 정부를 통해 송환한 유골은 2,073위에 불과함(※붙임1 참조).
 - 해방 이전에 송환한 유골은 해군관계 2,433위임(육군 관계 자료는 남아있지 않음).

※ 1971년 일본 정부가 제공한 『구일본군 재적·조선출신·사망자 연명부』를 근거로 한 조선인이 100명 이상 사망한 지역

사망지	사망자수	사망지	사망자수	사망지	사망자수
필리핀	2,597	마리아나	335	타이완	458
인도네시아	2,280	쿠에제린도	310	중국 호남성	219
사이판	1,101	페리리유도	254	중국 호북성	134
뉴기니아	1,076	미레	214	중국지역	809
팔라오	632	부라운	211		
길버트다라와	564	라바울	188	마이즈루	481
히레바스도	513	유황도	139	오키나와	267
트럭섬	484	바시해	101	도쿄	150
버마	453	부도	114	시고쿠	131
기르바도	452	메레온	109	일본전역	766
괌	358	솔로몬	101		
루손	344	소련 북천도	543	조선	290

- 해외 전쟁터에서 사망한 일본인 군인·군속은 약 240만 명으로 지금까지 그 중 약 반수인 127만 명의 유골이 봉환되었는데(※붙임2 참조), 이 과정에서 **한국인 유골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음.**

- 일본으로 봉환된 유골 중 신원이 확인 안 되거나 유족이 확인 안 된 유골은 1959년 일본 정부가 건설한 지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에 안치됨.

※ “흩어져 있는 유골을 긁어모으는 식이었다. 그 당시는 같은 부대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이 일본인이라든가 대만인이라든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대만인이라든가 조선인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없다. 하물며 그것을 판명해서 두고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2005.6.28., 오쓰지 히데히사(尾辻秀久) 후생대신)

- 이렇듯 일본인 유골 봉환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채 한국, 북한, 대만 출신자의 유골이 일본인 유골에 섞여 송환되었고 일본의 국가시설에 납골되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

- 들 정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음.
- 일본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희망하는 일본 유족에 한해 국비로 DNA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 3월까지 1,210건의 신원이 판명됨.
- 현재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 712위가 일본 도쿄 소재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되었는데, 북한지역 출신자 431위, 한국 출신자 281위(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 272위 포함)임 (※유텐지 보관 유골 현황 확인 필요).
- 우키시마마루 사건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골을 봉환하면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을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유골(280명) 봉환을 거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등 해외 전쟁터와 시베리아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한국인 군인·군속 유골 실태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음.

2-2. 노동자

-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사망자 수와 국외에 남겨진 유골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운 상황임.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는 1939년 이후 한반도 외로 동원된 노동자 수를 1,045,962명으로 파악, 사망자 수와 남겨진 유골 수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일본 정부는 민간인 노동자 유골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했고 한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04년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전시 중 사망한 민간징용자 유골 수습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하여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유골 봉환 문제가 논의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
- 2005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일 간에 국장급 협의 7회, 실무자급 협의 9회가 개최됨.
- 2011년 이후 유골협의 대표가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으로 변경되었음.
-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자 유골봉환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음.
- 한일 유골협의를 통해 일본 전역에 산재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실태·실지조사를 실시

했는데, 2015년 4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제공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시설은 339개소이고 유골은 2,798위임.**

- 2,798위 중 **개체성이 확인된 확보된 것은 1,337위(성명 확인 1,134위)**,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유골은 167위로, 강제 동원되어 전시 중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 유골조사에는 전일본불교회가 전국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조동중, 서본원사, 동본원사는 종단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함.

※ 일본지역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실태와 봉환 경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해방 후 일본지역의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및 시설 등에 관한 현황 실태(귀환 미귀환)**』(책임연구원: 김민영) 참조

3.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의 역사적 경위

- 식민지에서 독립한 조선은 분할 점령되었고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유골 봉환문제는 외교 문제로 변질됨.
- 유골 봉환은 1947년 2월 2일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시로 재개되었는데 유족(친척)이 38도선 이남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됨.
 - 구체적으로는 1948년 2월 3일 4,597(유골 456)위, 5월 31일 3,046(유골 330)위가 남한의 조선과도정부에게 인도됨.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후 조선인 유골에 대한 개별적인 명부 조회가 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도 유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¹⁾, 후생성은 1954년 8월 외무성에 조선 출신 군인·군속 전몰자 명부를 제공하고 유골 송환에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함.
 - 외무성은 “본 건은 **본래 일한회담의 의제이지만 ①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와, ②유골을 인도하는데 있어 조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③일반징용자와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회답함²⁾.
- 한국인 유골의 봉환문제를 복잡하게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조선인 유골이 남한과 북한의 유골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음.
 - 외무성 아시아1과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 유골을 인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³⁾와 “한국인 유골 전부를 한국에 인도했을 경

1) 1955.12.22, 아시아局第5, 「朝鮮出身戰者の遺骨送還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2) 1954.8.4, 아시아局第5 「朝鮮出身戰者關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3) 1956.6.7 아시아一課 「朝鮮人戰没者遺骨問題に關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우 유골에 대한 적당한 인도 청구권자(친족)가 일본에 있을 경우 조총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동북아시아과의 견해⁴⁾는 일본 정부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한국 정부는 강화조약 발효 전부터 이미 조선인 유골에 대해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해는 유족의 소유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반환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양국 간 의견이 대립하고 교섭은 진전되지 못했음.
- 한편 북한 유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일본인을 귀환시킬 때 사용될 선박을 이용하여 송환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1955년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며⁵⁾, 그 후에도 적십자사를 통해 유골을 송환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송환에는 이르지 못했음⁶⁾.

○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전몰한 한국인 유해의 인도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유족 및 연고자에게 해당 유해를 전달한다”는 것에 합의했음⁷⁾.

-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세 등을 이유로 유족에게 개별적인 사망통보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1971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1,919명이 등재된 『구 일본군 재적 조선 출신 사망자 연명부』를 송부했음.
-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따른 유골 봉환을 보면 먼저 한국 정부가 유골 수령을 희망하는 유족을 파악해 그 명단과 신청자의 신상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
- 일본 후생성은 유골 수령 신청자의 호적등본(초본)으로 신분관계를 조사하고 또 신청자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인도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골을 한국에 송환하여 유족에게 전달했음.

○ 1974년 1월 25일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 후생성이 보관 중이던 조선인 유골 중에서 한국 출신자는 전부, 북한 출신자는 그 유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골을 3월 10일까지 한국에 송환하도록 일본 외무성에 신청했음.

-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백년 후에도 모국에 봉환되지 못하는 유골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⁸⁾”이라고 남한 출신 유골의 일괄 송환을 주장함.
-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의 양해사항에 따라 송환해야 한다고 하여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음.

4) 1966.11.16 北東アジア課「韓國人遺骨の引渡しに関する法律上の問題について」(외무성 공개문서)

5) 1955. 12.22 アジア局第五課「朝鮮出身戦没者の遺骨送還に関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6) 1960.2.5 北東アジア課「朝鮮出身軍人軍属の遺骨返還に関する件」, 1966.2.4 北東アジア課「厚生省に保管している戦没韓國人の遺骨問題について」(외무성 공개문서)

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1997年

8) 1974.3.11 주일대사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국가기록원 소장문서)

- 일본 측이 남한 출신 유골의 일괄 송환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주일본한국대사관은 “북한과는 법률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북한의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일괄 인도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유족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법규에 비추어 정부의 패소는 확실하며 본건이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면 친북한 국회의원들이 전후 29년에 이르기까지 북한 출신분의 북한 봉환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추궁 받을 것이 뻔하며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촉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외교부에 보고했음⁹⁾.
- 1984년 이후에는 유족 판명이 곤란해져, 개별 봉환이 진척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해 본적지가 한국인 유골을 일괄 봉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음.
 - 1989년 한일 정부의 실무차원에서 일괄 반환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이후 반환 방법 등에 관해 교섭을 거듭했지만 양국 정부 간 정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에게 한국인 미간 징용자 유골 봉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일 정부 간에 유골협약이 개최되고 유골 봉환이 일부 추진됨.
 - 한일 유골협약의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분들의 유골조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유골 봉환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텐지(祐天寺)에 보관된 군인·군속 유골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졌음.
 - 2008년 1월 23일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423위 유골이 봉환되어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유텐지에 보관되었던 유골 중 우키시마마루 피해자 유골과 본적지가 북한 지역을 제외한 유골은 전부 국내로 봉환되었음¹⁰⁾.
- ※ 이 시기 유골 봉환은 이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데,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및 유골 수습보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붙임3 참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이것을 번역하여 유족에게 제공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희망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추도식을 거행한 후 유골을 송환했음. 추도식에는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외무대신, 후생대신)가 참석하여 사과를 표명했으며, 유족의 항공료와 숙박비, 유골 수송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조의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음¹¹⁾.
- 강제동원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할린한인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조사와 피해조사에 착수했고, 사할린한인의 묘지 조사, 사할린한인 관련 기록물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묘지 발굴과 봉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9) 위와 같음

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훗카이도 삿포로 별원 소장 유골조사』, 2017, 24쪽.

11) 위와 같은 책, 22~24쪽.

차수	일시	유골 수	주관
1차	2013년 8월 30일	1	강제동원위원회
2차	2014년 8월 29일	18	강제동원위원회
3차	2015년 9월 11일	13	강제동원위원회 ¹³⁴⁾
4차	2016년 9월 22일	11	과거사업무지원단
5차	2017년 9월 15일	12	과거사업무지원단
6차	2018년 9월 14일	16	과거사업무지원단
7차	2019년 10월 7일	14	과거사업무지원단
합 계		85	

- 2019년 정부는 미 DPAA가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유전자 교차분석한 결과 그해 11월 故 최병연 씨가 한국인임을 확인, 2023년 12월 봉환
 - 2020년 유해봉환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봉환 중단
 - 2022년부터 미 DPAA와 키리바시 공화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해 봉환을 재추진, 2023년 12월 3일 국내로 봉환, 추도식 거행(*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석)

4. 유골문제 해결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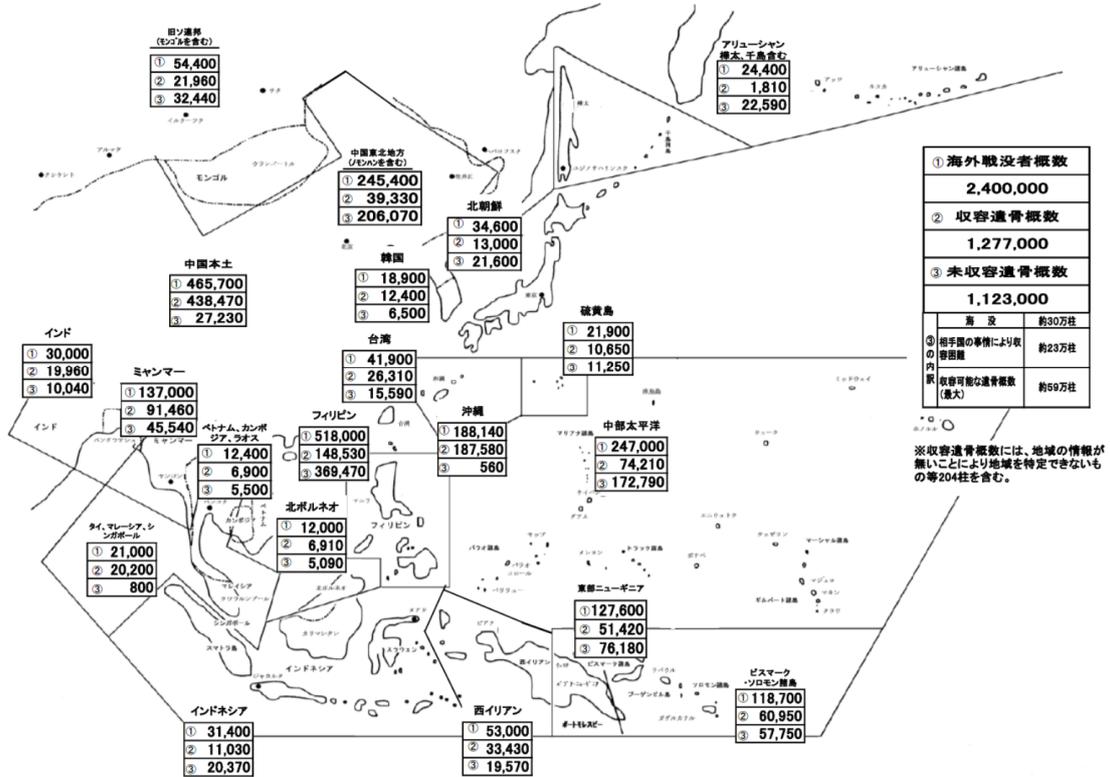
- 2005년 5월 2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유골문제 협의에서 양측은 인도주의·현실주의·미래지향주의라는 3대 원칙에 합의
-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아픈 역사의 치유와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유족의 의사이나, 현실적 여건도 고려 필요
-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 노력의 성과와 한계 점검 필요
 - (진상조사)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日本の長生炭鉱水没事故に関する真相調査』(2015, 일본어 번역) 등
 -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실태 정리)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 [일본 내 한국인 관련 재해, 재난 사고도] (<https://www.pasthistory.go.kr/etc2sInc/project.do?type=1>)
 - (유골조사 및 봉환) “국내 유골을 조기에 반환하는 것이 한국과의 약속”(일본 외무성, 2023.12.8.)

〈붙임1〉 한국인 군인·군속 유골 봉환 개요

연월일	유골 수(위)	유골 봉환 내역
1948. 2. 3 1948. 5.31	456 330	G.H.Q지시에 의거하여 후생성이 송환한 것으로 추정됨. 유족 전달 여부 등 관련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1958.5.16 1958.11.28		구레 지방복원부 해군 관계 유골 874, 후쿠오카현 육군 관계 유골 1,454위 총 2,328위 후생성에 예탁(1971.6.29 유태지에 2,326 예탁)
1970. 7. 1	1	일본인 덕적도 유골 수습단장이 서울 소재 일본 대사관에서 유족에게 인도
1971. 3.17	1	외무성 동북아과 직원이 서울 일본대사관에서 유족에게 인도.
1971.6.29		후생성에 안치했던 유골 2,326위를 유태지로 이관
1971.11.20	246	일본 외무성 직원이 부산공항에서 한국 외무부 직원의 입회 하 유족대표로서 재단법인 부산영원 이사장 정기영에게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인도(유족인도 11.29 - 214위, 1977.2.28 - 24위)
1974.12.20	911	부산공항에서 수송 책임자 후생성 정무차관이 유해 911위를 한국 보건사회부 차관에게 인도(유족인도 12.20 - 641위/ 1977.2.28 - 1위, 1977.2.28 부산 영락공원에 납골 269위)
1976.10.28	22	후생성원호국 조사과장과 2명의 직원 및 외무성직원 1명을 동행하고 나리타공항에서 부산공항으로 들어 와 부산공항에서 22위를 한국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장에게 인도
1978.3.30	1	후생성원호국 조사과장과 직원 1명이 동행,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한국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에게 인도
1982.12.7	5	후생성원호국 업무제1과장과 직원 1명이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일본대사관 직의 입회하에 한국 보건복지사회부 사회과장에게 인도
1984.4.24	1	후생성 원호국업무제1과장과 직원 1명이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일본대사관 직원 입회하에 한국 보건복지사회부사회과장에게 인도
1998. 3.10	4	황해도 출신 학도병 1위, 제주도 출신 3위의 유골을 후생성에서 한국 외교통상부로 인도
2005.6.16	1	외무성 직원이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보건복지부 직원에 전달
2008.1.23	101	유태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08.11.2	59	유태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09.7.9	44	유태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10.5.19	219	유태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12.12.3	1	타와라에서 사망한 1위를 유전자 감정 후 유족을 찾아 봉환
합 계	2,073	

〈붙임2〉 지역별 사망자 및 유골 봉환 실태(2023년 11월 현재)

地域別戦没者遺骨収容概見図(令和5年11月末現在)



〈붙임3〉 「후생노동성 제공 사망경위서 신상명세표(유텐지(佑天寺) 유골명부)」

今井 〇〇 氏의 정보에 대해서										
戰没者의 정보	祐天寺 遺骨名 簿番号	氏 名 生年月日	官 等	本 籍 地	遺 族			死亡年月日	死亡場所	死亡区分
					住 所	氏 名	続柄			
1	459	今井 〇〇 1923.2.9	陸軍 上等兵	慶尚北道大邱府 後 〇〇 〇〇	慶尚北道大邱府 南 〇〇 〇〇	今井 〇〇	兄	1945.3.8	湖南省 岳陽縣桃季橋 *(桃秀福)	戰病死
(注)*의 () 部分は、祐天寺의 遺骨名簿에記載되어있는内容である。										
2	履歷事項 (概要) 等									
	昭和19年	9月20日		步兵第79連隊に入隊						
		同日		鮮滿国境通過						
		10月1日		滿支国境通過						
	昭和20年	3月8日		戰病死						
3	遺骨의 保管狀況									
	陸軍關係者의 遺骨等は、昭和33年11月福岡県民生部から厚生省に移管され、昭和46年6月に祐天寺に預託され、現在も保管されている。									

토론

토론 1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토론 2 이경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3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4 김동명 국민대 교수



토론 1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에 대한 토론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에 대한 토론

김인수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남상구 선생님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에 관해 해당 사안의 현황을 잘 일별해 주시고 현실정치의 흐름까지 맥락화를 잘해 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평, 이를테면, (1) 식민지배, 전쟁동원, 한반도 분단과 냉전, 국제관계 등 거시정치, (2) 현실적인 실정법의 적용 범위, (3) 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조사의 성과, (4) 한일 양국 간의 지난한 교섭의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1절의 “유골문제란” 부분에서 해당 이슈의 발생 원인, 국가의 역할과 책무, 연구와 해결방안 그리고 기억의 문제까지 언급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에 의해 죽음에 이른 이들에 대한 접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마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이슈를 응시하는 데에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책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었을, 죽지 않아도 되었을 이들이 왜 그때 그곳에서 죽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현실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설사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늘 환기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화하고 애도할 것인가?” 강제동원으로 인한 죽음이 생물학적 신체의 훼손과 사멸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격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골의 송환은 훼손된 신체의 수습은 물론, 사회적 인격의 회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희생자의 유골을 찾아 유족에게 전달하고 그 죽음을 국가와 사회가 의미화하는 과정 - 애도 - 이 요구됩니다.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산자의 몫이고 남겨진 자의 몫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의미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애도는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보건대, 이 이슈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특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자료조사와 피해자 명부의 발굴 및 확정. 이전부터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정부, 피해자 유족단체, 한국과 일본의 여러 사회운동단체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수집,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헌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

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의 구술도 필요합니다. 유골과 유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신원을 확인해 유골 수령인을 확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남상구 선생님의 글 말미에 잘 소개되어 있듯이,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 전장의 미귀환 유골에 대한 파악(2023년 12월 故최병연 씨 유골의 귀환 사례), 강제동원 노동자 유골의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일반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찾아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생체/유전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조정력.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에 개입된 국제정치적 힘을 파악하고 이를 해체해가는 조정력이 필요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유골송환 문제는 한일관계, 북일관계, 남북관계 전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사안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 국제정치적 장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상구 선생님이 잘 정리해주신 것처럼 이 이슈가 복잡해진 데에는 유골송환 과정에서 ‘조선인 유골’이 ‘남한’과 ‘북한’의 유골로 바뀌었다는 점, 일본 정부가 한일교섭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는 유골송환 지연/불가의 논지로 고착화된 것이 작용했습니다. ‘조선인’으로 죽었으나 ‘남한’과 ‘북한’의 분단국가로 귀환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는, 큰 틀에서 보면 죽은 이들로서는 황망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치의 틀을 뛰어넘어 인도주의 관점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마리의 확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골송환 이슈는 한반도 분단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 ‘봉인’을 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분단의 쟁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붙임 1]의 자료에서 보면, 1948년 2월과 5월에 GHQ의 지시에 의거하여 후생성이 송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조선인’으로 죽었고 ‘분단 이전의 한반도인’으로 귀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8년에 유엔지에 보관된 유골(군인, 군속) 중 우키시마마루 피해자 유골과 북한 지역을 제외한 유골이 전부 한국으로 송환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미송환 유골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유골송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고 마땅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북일 간의 국교수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국교수립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응답이 필수적이고, 유골송환 문제도 마찬가지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함께 고려해가면서 이 이슈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골송환 문제가 한반도 분단으로 미완의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라면, 정치는 이 분단의 틀을 뛰어넘어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국가의 책무)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 2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남상구)

이 경 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남상구)

이경미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1. 연구의 의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는 시공간적으로 넓은 안목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글의 의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문제의 ‘골격’(유골문제의 정의, 대상자의 범위, 역사적 경위)을 한국의 입장에서 조리있게 정리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표자가 굵게 칠한 문장과 개념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 뜻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2. 유골문제를 ‘국제적으로’ 바라보기

발표자는 글머리에서 유골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골문제는 일제가 국가 정책에 따라 한국인을 군인·군속으로 전쟁터에, 노동자로 탄광 등에 강제로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1쪽)

이는 2004년 노무현-고이즈미 회담 이후 <한일 유골협약>의 경위(6쪽)를 염두에 둔 정의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합하지만 3장에서 기술된 역사적 경위(3~6쪽)를 보더라도 ‘유골문제’는 위의 정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외연’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정의하되, 외연에 흐르는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유골문제는 전쟁에 기인했던 만큼 ‘국제적’인 맥락을 지니기 때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국가적 책무’ 역시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

유골문제에 대한 관계 각국의 인식과 대응의 역사는 이 문제의 국제성을 잘 보여준다. 먼저 유골문제의 기원은 모든 관계국에게 공통적이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미국에게 유골문제는 ‘전쟁포로’ 문제였으며, 중국 역시 강제동원된 중국인들이 ‘전쟁포로’로 대우받을 것을 요구했다. 즉 연합국(미·영·불·소·중)에게 유골문제는 ‘전쟁범죄’라는 틀 속에서 취급되었던 것.¹²⁾

한편 패전국 일본에게 유골문제는 ‘전몰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 점은 발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54년에 후생성이 외무성에 ‘조선 출신 전몰자’의 유골 송환을 타진했을 때 “일반징용자와의 관련”(4쪽)¹³⁾을 이유로 거절당했던 점이나, 유골문제가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현황(1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을 엿볼 수 있다.

2004년의 노무현-고이즈미 회담과 이후에 이루어진 <한일 유골협약>은 기존의 틀에 대한 변경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를 계기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틀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속에서도 신구의 구별이 유지되어 있음. 예컨대 2008-2010년 사이에 봉환된 유골은 ‘전몰자’라는 틀 속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유평지(祐天寺)에 보관되었던 유골이며 ‘근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이다. 똑같이 전몰자로서 수집된 유골 중 ‘일본인’으로 분류된 유골은 유족에게 돌려줬거나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전몰자 묘원>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발표자도 지적하듯이(2쪽) 이 중에는 ‘일본인이 아닌’(조선인, 대만인 등) 유골이 섞여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DNA 감정’의 수단밖에 없다.

한편 근인·군속으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2004년의 노무현-고이즈미 회담 이후에 착수된 범주이다. 대부분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조세이(長生) 탄광 역시 바다 속에 침수된 채 조사를 기다리는 케이스이다.

3. 국가적 책무의 방향에 관한 질문

① ‘노동자’의 유골 중 봉환의 현황

발표문에서 노동자의 유골 중 ‘봉환’이 이루어진 사례로 언급된 것은 사할린의 경우만. 3쪽에 일본지역에 관한 보고서(『2019년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해방 후 일본지역의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및 시설 등에 관한 현황 실태』)가 주기되어 있긴 하지만, 내역에 대한 언급은 없음. 2004년 이후 전일본불교회의의 협력으로 파악된 유골 중에서 봉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의 의도는 유평지의 유골의 경우 기존의 ‘전몰자’라는 틀 속에서 수집, 보관되었던 것인 만큼 ‘새로운 인식과 대응’에 기초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임.

②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안치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의 가능성

12)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 하에 전쟁포로의 유골이 ‘존중하게’ 반환되었으나 중국과는 ‘전쟁포로인지 노무자(華工인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이 이루어졌다.

13) 여기서 ‘일반징용자’란 일본인 전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후 전몰자에 대한 유골 수집이 시작된 것은 1952년부터였으며, 전몰자에 대한 원호법이 제정된 것은 1952년이었다.

지도리가후치에 안치된 유골에 ‘비-일본인’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전몰자라는 틀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불완전성을 시사함. 그런데 이에 대한 DNA 감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현황은? 또한 DNA 감정의 필요성은 기존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유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예컨대 미국 DPAA(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에서 발굴한 유골에 한국인이 섞여 있었다는 지적(6쪽)은 ‘전쟁포로’라는 틀 속에서 처리된 유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의미하지 않은지? <지도리가후치>의 경우 전쟁을 ‘위해서’ 죽은 유골이라는 문제(야스쿠니-황거-유족회의 연계)를 안고 있기에 DNA감정 요구에 장벽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국제적인 접근’이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③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 개정의 의미

일본은 2023년 7월에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1쪽)에 따른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있다. 예컨대 발표문(1쪽)에서 언급된 유골 조사와 봉환 집중 실시 기간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이 “전몰자의 유골수집의 실시”에 관한 방침에 추가된 사항이다. 주안점은 “우리나라 전몰자의 유골”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일본인인지 아닌지’에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유류품, 형질 등을 근거로 감정을 실시, 일본인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 “DNA 감정을 위한 검체(유골의 일부)를 채취하여 본국에 가져와” 그 결과에 따라 수집한다는 것.¹⁴⁾ 요컨대 수집 이전에 DNA 감정을 도입하여 ‘일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 ‘일본인이 아닌’ 유골은 현지에 두고 오는 방침으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2011년에 있었던 ‘필리핀인 유골 혼입 문제’에 영향받은 측면도 있겠지만, DNA 감정이 국가주의적으로 잘못 이용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④ 국가에 ‘의한’ 피해 네트워크의 가능성

일본 안에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유골문제에 접근하는 흐름은 있음. <조세이탄광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그런 경우. <새기는 모임>에서는 유골의 수집에 앞서 희생자의 친인척을 찾아 DNA 검체를 채취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 출신 피해자의 후손을 찾은 경우도.¹⁵⁾ 조선인 피해 노동자(136명/183명)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되어 왔음. 같은 DNA 감정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함.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가능성의 모색 필요.

14)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stf/newpage_34372.html)

15) <https://ryukyushimpo.jp/news/entry-621754.html>

[참고] 일본에서 전몰자 유골 수집의 경위

- 1945~1952년 공백기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조인, 1952년 4월 발효)
- 1952~1958년 제1차 유골수집 계획 실시(1만 1,358명/240만명 수용)
 - 대상지역: 미국(이오지마, 오키나와, 사이판, 괌 등), 동남아(필리핀, 보르네오 등)
- 1953~1959년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전몰자 묘원
 - 계획 각의결정(53년), 착공(58년), 준공(59년)
 - 후보지로 야스쿠니신사, 황거, 점령군 숙소(Washington Heights) 등. 종교법인이 된 야스쿠니에 국가시설 건설은 헌법 제20조(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지도리가후치에 결정.
 - ‘국가를 위한 죽음, 영혼은 야스쿠니에 있다’
- 1958~1967년 공백기
 - 1차 계획에서의 방침: 일부 ‘상징적 유골수집’과 현지 추도행사로 종료
- 1967년~1972년 제2차 유골수집 계획
 - 대상지역: 1차 지역, 남태평양(뉴기니아, 솔로몬제도 등), 한국
 - 수집방침: 발견한 유골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 수용’
- 1972년~1975년 제3차 유골수집 계획
 - 제2차 계획의 연장
- 1991년 소련(고르바초프)이 시베리아 억류(1945~56) 희생자 명부를 제공
 - 계기로 수집 시작, 2023년 현재 약 2만명(/5만명)의 유골 수용

토론 3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와 책임

한 혜 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와 책임

한혜인 연구위원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1.

남상구 선생님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유골문제'에 대한 한일 국가 간의 정책과 봉환실태를 잘 정리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홋카이도지역(2022년)과 긴키지역(2023년)에 남겨져 있는 유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상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2004년 협의 이후에 일본정부가 조사한 조사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남상구 선생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저의 두 번의 조사 경험을 통해, 소위 유골문제, 특히 현재 일본지역에 남겨져 있는 유골들의 상황과 그 유골을 어떠한 범주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더해 보고자 합니다.

2.

유골문제는 인류사회가 혹은 국가가 그 구성원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기념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공동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기념은 현재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한 존경과 보호의 방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영속시킬 수 있는 공권력을 수용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골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적 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명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구제해야 할 대상을 '국민'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에 대한 실태는 남상구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3.

일본정부도 군인군속의 문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골 문제는 아직도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사망처리는 각 사업체가 공장법·광산법

등에 부속되어 있는 부조에 따라 처리되어 왔습니다. 당시의 유골처리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

1939년 12월 홋카이도 미츠비시 유바리(夕張)탄광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동원되어 온 조선인 노동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회사가 사망한 조선인을 화장해서 사망을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측에서는 화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시신을 조선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화장하지 않고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죽음을 다루는 조선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사망자의 유족을 불러, 시신을 확인하게 하고 화장하여 봉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장면 2.

1941년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호로나이(幌内)탄광에서는 사망자의 유족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 유골을 부근 절에 맡겨 두었다가 계약기간 만료(2년)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계약연장을 약속받고, 일시 귀향시키면서 동향의 사망자 유골을 보냈다.

4.

이와 같이 당시 강제동원 노동자의 사망은 전적으로 고용사업자가 처리했습니다. 위의 예는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라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하청회사들은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여서,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 탄광의 토목공사를 맡았던 여러 건설회사의 경우는 근처 사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유골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 홋카이도 혼간지에서 합장된 유골이 명부와 함께 발견되었을 때, 한국 주소지를 가진 60여 명 중 주소지가 명료한 약 2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유족을 찾으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족이 찾아진 것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5.

해방 이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골은 개별적으로 봉환되어 왔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민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 조사를 통해 모아 봉환이 되어 현재 망향의 동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분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6.

2차례의 유골조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홋카이도와 긴키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유골조사에서 얻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시기 전후에 사망한 사람, 전시기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사안으로는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유골 중 일본 홋카이도의 호류지에서는 유골을 합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서는 유족이 사고당시 유골을 반환받았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기저는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사찰도 유골 자체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관련 기록이 거의 없고, 주지가 젊어짐에 따라 기억의 전달이 부정확해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남겨져 있는 유골은 대부분이 강제동원 피해와는 무관한 사망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

여기에서는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남상구 선생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본 조세이탄광에 수몰되어 있는 조선인들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구와 활동해 오신 나가사와 시게루(長澤 秀)선생님은 한일 시민이 모여 수몰된 조선인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유족에게 봉환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작업으로 이 문제를 구체화해 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남상구 선생님께서는 유골문제를 “일제가 국가 정책에 따라 한국인을 군인·군속으로 전쟁터에, 노동자로 탄광 등에 강제로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행하고 있는 유골반환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이어야만 합니다. 한국정부가 행하고 있는 유골반환은 일본정부가 ‘국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이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것으로 유골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유골들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봉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식민지기 어떠한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가 사망에 이른 이 식민지민의 죽음은,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일본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은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던 제국세력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뿐 아니라 스스로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보호와 존경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토론 4

강제동원 유골 문제

김 동 명
국민대 교수

강제동원 유골 문제

김동명 (국민대)

이 글은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의 「유골 문제」에 관해 역사적 경위와 현황을 밝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일간의 「유골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유골 문제」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 결과 발생한 「부(負)」의 유산으로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조속히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였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한일관계의 전개 등의 영향으로 식민주의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2004년에야 겨우 물꼬가 트여 2010년까지 유골의 조사와 봉환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유골 문제」의 해결이 진척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한일 간에 「유골 문제」를 전담했던 정부 간 국장급 한일유골협의체가 형해화되면서 최근까지 「유골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유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골 문제」의 경위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해결이 시작된 2004년 전후와 중단된 2011년 전후 당시의 한일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골 문제」의 실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이다. 이는 이전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훈풍」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대로 같은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에 동의했다.

다음에 「유골 문제」가 중지된 것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유골 문제」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졌다.

이러한 「유골 문제」에 관한 역사적 경위에서 볼 때 현재의 한일관계의 상황은 2004년에 가까운 「훈풍」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유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국장급 한일유골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여야 한다.

발표자가 소개한 대로 2016년 일본 정부는 비록 일본인으로 한정했지만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전몰자 유골 수집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2024년까지 유골 조사와 봉환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또한 한일 간 「유골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